

## 청년실업,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 헤럴드 포럼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학 박사



건설현장 등 숙련인력  
여전히 구인난 심각  
기능계 자격증 체계적 반영  
실업난 해소 모색해야

통계청의 2009년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29세의 실업률은 8.8%로 평균 실업률 4.0%의 두 배를 넘고 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층이 취업 능력을 높이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려 해 심각성을 더해준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선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 대(代)가 끊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08년 말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72%로 전체 취업자 평균 57%에 비해 15%포인트나 높았다. 힘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준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작업은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력에게는 고숙련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건설산업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현장의 숙련인력 구인난이 공존한다. 구조적으로 꼬여 있다. 하지만 두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청년층을 현장의 숙련인력으로 유도하면 된다. 그 실마리는 직업전망의 제시와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에 있다. 직업전망이 확실하면 청년층이 스스로 그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능력이 높으면 사업주가 다투어 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기처방으로는 곤란하다. 요즘 TV를 비롯한 매스컴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인턴사원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노동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실업 문제는 노동부가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인턴사원제로는 풀리지 않는다. 이는 사후적·소극적 단기처방일 뿐이다. 근본 대책은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사업주가 원하는 취업능력은 이미 고교나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결

정되고, 학생이나 청년층이 원하는 직업전망은 산업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설 분야의 청년실업과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적어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먼저 국토부가 현장배치 기준, 시공능력 평가, 건설업체 등록기준 등에 기능계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자격증에 담긴 현장의 취업능력 내용을 다른 부처에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직업전망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현장과 연계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국토부가 요구한 취업능력을 익히게 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독일의 건설현장과 한국의 전기공사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무분별한 대학진학 대신 확고한 장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